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성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6
----------	-----

발의연월일 : 2024. 6. 4.

발 의 자 : 김성회 · 최민희 · 이상식  
모경중 · 전용기 · 이기현  
백혜련 · 김용만 · 김영환  
김영진 · 최형두 · 김준혁  
의원(12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2. 1. 13. 시행)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의 개별법에서 특례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별법의 산발적인 개정보다는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률 제정하

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특례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도에 특례시의 지방자치 보장, 지역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특례시는 국가와 소속 도의 정책의 수립·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특례시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규정함. (안 제10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의 행정·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가 도 및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례시와 도, 인근 지역 간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레시에 대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각종 지역개발을 위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국가가 특레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특레시에 이양·위임되는 사무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특레시장이 소속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레시에 대한 특레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특례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례시”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를 말한다.
2. “도”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서 특례시를 관할 구역으로 두는 도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도의 책무) ① 국가는 특례시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도는 특례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도는 특례시 및 인근 지역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는 특례시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특례시의 책무) ① 특례시는 특례시에 대한 국가와 도의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특례시는 도 및 인근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특례시는 도의 지위 및 권한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특례시의 조직, 운영, 특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례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 자치 실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 및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례시 지위 및 권한 확보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행정·재정적 특례 부여를 위한 주요 과제 및 추진방향

3. 제11조에 따른 영향평가의 실시 계획

4. 제11조에 따른 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한 도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방안

5. 그 밖에 특례시 지위 및 권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 및 특례시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특례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  
하고 특례시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특례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특례시의 행정·재정자주권 제고, 사무처리 지원 및 제3조제2항  
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  
에 부의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도지사, 관계 특례시장으로 한다.

④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3.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도지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특례)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축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 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
5.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신청서의 제출
6.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의 책정
7.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8.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5항 및 제22조에 따른 환경개선 부담금의 부과·징수
9. 「항만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 업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2나목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행정 업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7항제2호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에서 시·도가 행정주체이거나 시·도지사가 관리청으로서 수행하는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행정 업무,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업무, 같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보고 등의 업무 및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같은 법 제1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로 한정한다)의 부과·징수 업무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방치 선박 제거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 공유수면의 관리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로서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로 한정한다]의 절차 및 심사에 관한 업무

12.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44조, 제46조, 제50조의3,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4조 및 제57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등의 업무
14.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광역소하천정비종합계획 심의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업무
1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 30만제곱미터 이하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6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업무
1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청 업무
18. 「의료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의 업무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추천에 관한 업무
20.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및 지원(支院) 설치 업무

21. 「주택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인수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공급 또는 현금 납부 명령 업무
22. 「주택법」 제72조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업무
2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같은 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에 따른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같은 법 제33조, 제34조까지에 따른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같은 법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감면·조정·징수유예·분할납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취소와 배출시설 폐쇄 및 배출시설 조업정지 명령,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의 업무
24.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및 관리
25.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합병·상속 등의 신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

사업자의 상호·명칭 등 변경 신고 및 폐업신고,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공사업자의 지도·감독,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시정명령,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등록 등의 공고, 같은 법 제72조의2에 따른 공사업 현황 등의 보고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

26. 「물류정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지역물류현황조사, 같은 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와 기초자료 제출 요청과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업무

27. 「산림보호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고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허가·신고, 같은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8. 「물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29. 「물환경보전법」 제68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업무

30.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 및 적합 여부 통보와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수리 및 허가기간의 연장과 조건의 부여 및 관련 서류의 접수,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취소 및 영업 정지명령,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같은 법 제46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신고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업무

3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

3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

33. 「농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변경허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협의(다만, 대상농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농업진흥지역 안의 3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자연농지지역 안에서의 농지의 전용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특구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의 전용

라.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의 변경. 다만, 전용하려는 농지의 총 증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전용하려는 농지의 총 증가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그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전용하려는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의 증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4.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

3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승인취소,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청문 등의 업무

3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변경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수리의 통지

37. 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지정신청서 접수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업무

38.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한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의 지정·연장 및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같은 법 제

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 및 공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제2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들에게 행하는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제24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업무

39.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및 신청

4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 변경 요청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 수립 협의 업무

41.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0조의2에 따른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요청

4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 선정. 초광역권산업 선정하는 경우에는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추진 계획 수립 및 고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집행 실적



제출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사항 조치,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같은 법 제7조의8 및 제7조의9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시행 및 재원 부담,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부담금 부과율 조정, 같은 법 제11조의4부터 제11조의6까지에 따른 및 부담금 부과·징수·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제11조의7에 따른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조성 및 운영·관리 업무

4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1조 및 제53조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운영·구성 등의 업무

4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설치·운영 및 교육훈련 실시

4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추진·지원 및 성과 분석 및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정 신청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중장기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발전전략 수립·시행 등의 업무

4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제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청,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요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체 요청

4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 및 지정 해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명령 등 감독 업무
49. 「하천법」 제8조에 따른 관할 구역의 지방하천 관리,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협의,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허가·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 및 준공인가 및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관리 업무
50.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아닌 사방지에 대한 사방사업으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및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같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국가사방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을 위한 토지 출입·장애물 변경 또는 제거와 이에 따른 손실 보상,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사방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등의 수용·사용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사방시설로 인한 수익의 교부 업무
51.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및 폐지

5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과 운송사업자에 대한 벌점 부과 및 면허취소 또는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 명령
53. 「농지법」 제31조 및 제31조의2에 따른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의 변경·해제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5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
55.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5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 이전에 관한 의견 제시
57.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특례시의 사무로 규정하는 사항
- 제11조(영향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행정·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가 도 및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특례시와 도 및 인근지역 간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 및 특례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특례시에 대

한 행정·재정 특례 등이 도 및 인근 지역의 행정·재정 운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례시에 대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각종 지역개발을 위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특례시에 이양·위임되는 사무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특례부여 및 지원) ① 특례시장은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특례시에 대한 특례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③ 도는 특례를 부여받은 특례시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도 또는 특별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 도 및 특별시의 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